

“저출산·고령화, 경기회복 걸림돌... 선제 투자 나서야”

저출산 극복, 고령화 대비가 희망이다

〈3부〉 ⑥ 고령화 준비 현황과 대비책 (끝)

국가주도 정책에 국민 체감 미미
개인선택 존중·자녀양육 인권 등
정책운영 바뀌 사람중심으로 전환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다. ‘골든타임’을 살려내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한국사회의 인구절벽 문제를 우려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위해 무려 150조원 가량의 돈이 사용됐지만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에 ‘사람’이 아닌 ‘국가’ 만이 낡았다는 지적이다. 국가주도 정책으로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제고하는 목표를 설정해 실질적인 국민들의 체감 혜택이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서울시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일자리 안정자금 재정집행 시스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했다. 2016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40만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00년 63만4500명에서 2002년 49만2100명으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40만6200명으로 겨우 40만명 선을 유지했다.

청년층의 출산 기피 현상이 이처럼 심화된 가운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14%를 넘어서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65년 52.5%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바 한국사회의 ‘노후화’는 불가결한 선택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인제가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또 고령화로 복지정책에 국가 재정이 쏠리면서 여타 청년층에 돌아갈 혜택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에 “출산율과 출생아 수 자체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정책’이 아닌 결혼 및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과 자녀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저출산·고령화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주장한 공약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보육시설 이용률 확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최장 24개월 임금 삭감 없는 유연근무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이 이에 따른 정책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혜택 미미한 정부 정책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출산율 향상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을 꼽았다. 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육아휴직(11.4%) 등의 순이었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 조사에선 지난 2006년부터 국가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의 65%, 약 83조원이 보육 관련 정책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5세 아이를 둔 부모만이 한시적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했던 정책 예산으로 평가된다. 고령화 대응책으로도 ‘사회통합적 외국인력활용’,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등 한국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정서가 담긴 정책으로 국민들의 외면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당장 올해부터 ‘재정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정책 운영의 틀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올 초 신년 만찬 기자회견에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과제는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서 “지출구조조정을 고도화하고 심화해 나가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선제 투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무급제 등 고령자 활성화 대책 마련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생산가능인

구(15~64세)의 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꼽힌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지난해 73.1%에서 오는 2027년 66.3%, 2037년 58.3%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인 노동력 부족과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한국경제의 경기 침체 등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때문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분석이 나온다.

오민홍 동아대 교수는 “고령화 파도가 노동시장에 밀어닥칠 것을 생각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령자 활성화 정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고령 인력 활용률 제고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고령 인력 활용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기업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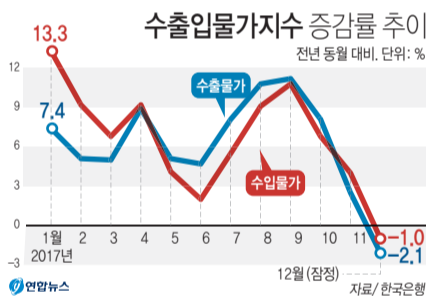
수출입물가, 두 달 연속 동반 하락

지난달 수출입물가가 두 달 연속 동반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7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2010=100)는 84.50으로 전월 85.86 대비 1.6% 낮아졌다. 지난해 11월 -1.6% 이후 두 달 연속 하락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도 2.1% 낮아지는 등 지난 2016년 10월 -1.4% 이후 14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1105.04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12월 1085.78원으로 1.7% 떨어졌다.

지난해 10월까지 다섯 달 연속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타던 수출입물가는 11월부터 기세가 꺾였다. 두바이유는 지난해 11월 60.82 달러에서 12월 61.61 달러로 1.3% 상승했지만 원/달러 환율 하락 폭이 더 컸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물과 냉동수산물(-4.2%) 중심으로 전월 대비 3.8% 하락했다. 공산품은 전기 및 전자기기(-2.2%), 수송장비(-2.1%) 등을 중심으로 1.6% 하락했다.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82.34로 전월 82.97 대비 0.8% 하락했다. 두 달 연속 하락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전기 및 전자기기 -1.8%, 제1차 금속제품 -1.6% 등 하락했다.

/이봉준 기자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부당”

WTO, 美 보호무역 세동

상소 포기로 승소 최종 확정

우리나라와 미국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주요 쟁점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유정용 강관(OCTG)은 원유, 셰일가스, 천연가스 채취 등에 사용되는 고강도 강관으로 그동안 미국은 지난해 최고 46%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해왔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월(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우리나라

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미국의 상소 포기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WTO는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된 부분 등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분쟁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WTO 협정은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

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내에 이행을 완료할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분쟁결과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이 이행절차 완료시에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액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거주자 외화예금 830억 달러... 최대치 경신

800억 달러 돌파 후 한 달 만에 기록

지난달 외화예금이 또 한 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기업과 개인의 달러화 예금이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17년 12월 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830억3000만 달러로 전월 대비 26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800억 달러를 돌파한 거주자 외화예금은 한 달 만에 또 다시 기록을 경신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기업 등 국내에 예치해둔 외화예금을 일컫는다.

통화별로는 달러화예금이 26억5000만 달러 늘어 707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기업의 달러화 예금이 17억5000만 달

러, 개인이 8억7000만 달러 증가하여 각각 669억5000만 달러, 160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엔화 예금은 2억2000만 달러 늘어난 57억9000만 달러, 유로화 예금은 3억3000만 달러 줄어든 34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이 예치해 둔 수출입 결제대금이 늘었고 환율 하락에 수출기업들이 무역대금을 원화로 바꾸지 않고 기다리면서 달러화 예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환율이 떨어지면서 개인들도 달러를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은 평균 1085.78원으로 전월 1105.40원 대비 1.7% 하락했다.

은행별로는 국내 은행이 23억3000만 달러, 외은 지점이 2억9000만 달러 늘며 각각 703억4000만 달러, 126억9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봉준 기자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공개

정부, 신용제재 대상 326명도 공개
공공·민간고용포털 등에 정보 연계

정부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198명과 신용제재 대상자 326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명단공개 사업주의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등 개인정보와 체불금액은 2021년 1월 14일까지 3년 동안 관보,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상시 게시된다.

또 워크넷, 알바천국, 알바몬 등 공공·민간고용포털에도 정보가 연계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구인활동이 제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도 개인정보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게 제공되고 2025년 1월 14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연안여객선 이용 1690만명 지난해 역대 최대실적 달성

지난해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6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2016년 1541만 명 보다 약 10% 증가한 169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6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3년 1606만 명 이후 4년 만이다.

특히 지난해는 5월과 10월의 긴 연휴로 인해 휴가객 및 귀성객이 증가했고 큰 태풍 없는 안정적인 날씨가 계속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78%를 차지하는 일반 여행객이 1319만 명으로 2016년 1172만 명에 비해 12.5% 증가했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겨울철(1월, 2월, 12월)에는 이용객이 비교적 적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여객선 이용객이 골고루 분포됐다.

/세종=최신용 기자